

교사노조 소통·국외연수비... 광주교육청 '도마 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2차 정례회 희망교실 논의 소통 부족 지적나와 해외연수 비용 ↑, 보고서 부재 질타 시교육청 "선택과 집중 통해 운용"

광주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교사노조와 소통문제부터 늘어난 국외연수비 등 각종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룬 내년도 본 예산안은 전년대비 3757억원이 감소된 2조 6818억원이다.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교문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광주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3-4차 교문위에서는 '희망교실'이 연일 화두로 떠올랐다. 교사가 학급 학생들과 함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인 '희망교실'이 일몰사업으로 지정돼 폐지 수순을 밟고있는 가운데 전남 광주교사노조가 희망교실 예산 24억원을 편성해달라고 광주시의회 교문위에 촉구했기 때문이다.

심철의 의원은 "희망교실이 교사들에게 유용하게 쓰였을 수도 있겠지만 사용자들 면밀히 보면 부작용도 꽤 있었던 걸로 알고있다"며 "예산을 기관과 소통하지 않고 곧바로 회의에 요구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귀순 의원은 "지난 7월 20일 '교사가 묻고 교육감이 답하다'는 행사에서 희망교실에 대해 교육감이 (희망교실) 부활을 원하는 교원들이 많으니 다른 대안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며 "실제로 검토가 이뤄졌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해당 발언이나 내용에 대해 들은 바가 없어 검토하거나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자 이 의원은 "노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으나 소통이 잘 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희망교실 폐지로 인한 교사들의 아쉬움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에 학급운영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차별없는 보편적 복지 기조를 살리고자 한다"고 답했다.

전반적으로 광주시교육청의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늘어난 해외연수비용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심창욱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유·초·중·고·특수교육 교원 국외연수비가 19회에 걸쳐 18억원이다. 그중 5개 사업비 4억6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광주시교육청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더 늘렸다"고 질의했다.

시교육청은 "코로나 이전에 진행했던 국외연수가 코로나로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되는 연수가 대부분이다"며 "그럼에도 해외연수에 동원되는 교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답변했다.

심철의 의원은 "핵심 사업인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가 지난 9월 1차 끝난

후 교육청 측에 결과보고서를 요구했을 때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학생이 생활 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데 결과보고서도 없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 내년 예산안에 (해당 사업을) 포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교문위 위원들 사이에서는 △사립학교 보조금 심의 필요성 △과도한 홍보비 집행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이중복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28일 2024년도 광주시교육청 예산안을 제출하며 시정연설을 통해 2024년도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2024년 예산안은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세입재원 감소로 교육재정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차질이 없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조례 발의 이숙희 북구의원



광주 북구의원 이숙희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사진)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0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30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보육 현장 변화와 학부모 과도한 요구 및 부담한 대우로 보육교직원 직무 스트레스가 심화되면서 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례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설치·운영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월 간담회를 실시하고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국지운 센터장을 포함해 법인, 민간, 가정 어린이집연합회장과 유문어린이집 박혜민 교사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사항 및 실태,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며 조례에 반영한 바 있다.

이숙희 의원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직원 정당한 지도활동에 대한 보호 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권익 보호 및 지원사업을 통해 보호망을 마련해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정부 예산안 재검토 결의안' 채택 남구의회



광주 남구의회는 30일 진행된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4년 정부 예산안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노 의원은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은 약 657조 규모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며 "수출부진, 고물가 등 상황에서 국가가 지출을 줄인다면 민생은 피폐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R&D 예산은 올해 대비 16.6%인 5조 2000억 원이 감액 편성됐다"며 "기존 연구 성과도 유실될 수밖에 없는 R&D 연속성을 감안하지 않은 판단이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 대비 65.6%인 4206억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은 142억 원 감액 편성했지만,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정부가 지방교부세 감액이 필요한 경우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지방교부세를 감액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남구의회 의원들은 정부와 집권여당은 2024년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 감액 편성 예산을 재반영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정성아 인턴기자

전현 단체장 항소심 '희비' 허석 전 순천시장 벌금 90만원 강종만 영광군수 직위 상실형

항소심 법원 판결에서 전남 지역 전현직 지자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허석 전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아 피선거권 박탈을 면했지만 강종만 영광군수는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심 300만원의 벌금형을 감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허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11월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 공범인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허 전 시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에만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형사1부는 같은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의 항소심에서 강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강 군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송민섭 기자



지진대피 훈련 30일 광주 북구 국공립 태봉어린이집에서 열린 재난대응 지진 대피 훈련에서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과 아이들이 지진으로 인한 화재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빈대 출몰 증가... 지역대학 '느슨한 방역' 아쉬움

주먹구구 방역... 효율성 떨어져 '방역 사전공지·설명 없어 불안' 광주시 8일까지 전체 대학 점검

"방역 실시 후에도 빈대가 발견되지는 않을까 여전히 불안해요."

전국적으로 빈대가 출몰하고 있음에도 광주·전남지역 대학에선 정해진 방역체계 없이 주먹구구식 방역활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인천 사우나, 대구 계명대 기숙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빈대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에서도 빈대 발견 소식이 자주 들려온다. 지난달 27일 목포시 한 찜질방과 지난달 14일 광주 서구 단독주택 반지하에서도 빈대가 발견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전남에서는 11건의 빈대 관련 신고가 접수됐으며 진도, 신안, 나주, 목포 등에서 4건의 빈대가 확인됐다.

숙박, 목욕업소, 기숙사 등 다중 이용 시설 이용자들의 빈대에 대한 공포가 커

지는 분위기다.

지역 곳곳에서 빈대 발견이 잇따르자 광주·전남 대학들은 기숙사 점검 및 방역 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대학마다 방역방식이 다르고 사전공지 없이 진행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광주 한 대학에서 만난 A학생은 "광주·전남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많이 됐다"며 "방역 이후에도 빈대가 나올 수 있다고 들어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 소재 대학 생활관 운영팀에 문의한 결과 빈대 피해를 막기 위해 △호실 점검을 통한 빈대 발생 여부 파악 △선제적 조치를 위한 호실 방역 △각 층 살충제 배치 △빈대 발생 시 신고 방법 안내를 부착 등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 권고 사항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자체 방역에 그치고 있다.

기숙사 입사생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B학생은 "대학에서 진행하는 방역이

못 미더워 살충제를 구입해왔다"며 "방역 관련 공지가 적고 설명이 부족해 방역한다고 해도 의심스러워서 매트리스와 방 곳곳에 살충제를 뿌렸다"고 말했다.

C학생은 "학교에서 방역 소독을 하긴 했는데 사전 안내없이 학생들이 있는 방에 들어와 방역을 했다. 방역 이후 관리자 방문이나 의견조사도 없었고 각 층마다 살충제만 비치했는데 마치 개인이 알아서 방역하라는 느낌"이라며 "살충제 분무기 사용법도 적혀있지 않고 빈대 발견 시 화학전 방제 살충제를 사용하라는 문구만 있어 이용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광주시는 광주 소재 대학교 기숙사 11개소를 대상으로 빈대 관련 예방조치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모든 대학 관리가 어려워 빈대 관련 방역을 권고, 매주 빈대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빈대 집중 점검 및 확산 방제 기간인 내달 8일까지 전체 대학 기숙사 점검을 목표로 방역 활동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정성아 인턴기자